

2017 냉전개념사 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냉전초기 한국에 있어 법의 개념과 법치의 이념 (1948-1960)

김성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 개요:

헌법재판소는 건국헌법 제정 이래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념적 요소는 다수의 지배라는 정치적 원칙과 법의 지배라는 법의 원칙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가지 원칙은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이 두 가지 원칙의 조화로운 결합에 달려 있다. 본 연구는 냉전초기 한국에 전파된 법의 개념을 건국헌법을 둘러싼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법치의 이념 일반이 50년대 한국의 정치 및 지식사회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며 굴절되는 양상을 한반도 냉전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추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용과 왜곡이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공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개념사적 시좌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연방개념의 수용과 통일담론의 진화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연구 개요:

이 글에서는 냉전 시기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연방(聯邦)’ 개념이 수용되고 이것이 통일담론의 진화에 반영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중앙집권의 전통을 이어왔고, 일제 강점기에도 강압적인 통치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연방은 낯선 개념이었다. 연방이라는 정치제도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도 국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역들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제한적인 채로 남았다. 더군다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1960년대 이후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이 추진되면서 연방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 한국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표준’을 제공한 미국이 공식적으로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 수준에서나마 유지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들어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변화하게 된다. 애초에 한국정부와 사회는 이를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략’으로 간주했고, 또 그러한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연방은 특

히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금기어’가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통일방안이 일정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음에 반해 남한정부는 “교류와 협력, 공존만을 강조했다”는 자각이 일어났고, 이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비롯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여러 통일담론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통일담론들은 연방이라는 표현을 삼가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상당 부분 연방적 요소를 포함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연방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금기어가 되었다가, 통일담론을 통해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인권 개념의 발전과 전파: 냉전기 인권 개념의 한반도에의 전파를 중심으로

김헌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 개요:

인권이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는 권리이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은 국제정치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다양한 인권조약이 체결되어 국가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기대와 정체성까지 형성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인권은 서구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의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인권은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인권위원회 혹은 인권 전담 부처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가들의 행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 원칙은 이미 개별국가의 정치적 자율성과 영토적 통일성을 보장하는 주권 원칙과 함께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인 인권의 발전에 대해 냉전 시기의 발전과 동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인권 개념이 세계 인권선언(1948)과 함께 국제정치에 등장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미소 간의 대립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리된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어떠한 작용을 거쳐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특히 인권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제무대에서 이루어진 정치 과정과 개념의 변화 과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과정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도 동시에 살펴본다.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각각 국내의 정치과정에서 혹은 서로 간의 상호 작용에서 인권을 어떻게 이해했고 사용했으며, 이러한 인권 개념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인권이 냉전기에 국제정치, 지역정치, 국내정치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러한 발전 과정이 개념의 전파 동학(diffusion dynamics)에 미치는 함의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식민통치의 유산과 냉전기 폭력담론의 구성과 전개

문유미 (스탠포드대학 역사학과)

연구 개요:

냉전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는 정치를 전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냉전기 강대국들 사이의 열전은 제한되었던 반면 주변부 지역에서는 정치폭력이 빈발하고 열전 발발의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권현익 교수는 주변부의 열전과 중심부의 냉전을 통합하여 보는 것이 냉전의 전개와 종결을 연구하는 합당한 시각임을 그의 “또 하나의 냉전 (The Other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이라는 저서에서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전개가 한국전쟁의 발발이라는 미증유의 폭력 사태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며 식민지 후기에서 해방공간, 그리고 냉전의 발발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폭력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식민통치 상황에서 폭력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폭력의 정치적 사용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가, 해방공간에서 각각의 정치세력은 어떤 폭력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가, 이와 같은 폭력담론이 한반도에서 냉전의 전개, 심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재규정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탈식민주체의 분열 - 민족개념의 변용을 중심으로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 개요:

‘민족’ 개념은 한국인이 독립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자임할 때 필수적인 언어였다. 탈식민주체를 표현하는 핵심어이고 한국인의 정치적 자의식을 구성하는 필수적 개념이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 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현대사가 경험한 질곡만큼이나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21세기 현재에도 이 어휘는 남과 북에서, 또 해외 한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면서도 중대한 긴장과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를 거치는 시기동안, 민족이라는 탈식민주체의 개념이 어떻게 변용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식민지 경험을 되살리면서 독립과 자주를 문화적으로 표상할 때 이 언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변용되는지를 여러 문화활동, 문화행사, 기념비 등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정치세력 및 사회단체, 학술단체 등이 탈식민의 과정이 분단국가형성이라는 원치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하며 전망하고자 했는지를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잠정적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머리말
2. 탈식민주체의 개념화: 해방공간에서의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평가 분석
3. 분단국가형성과 문화정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정치경제적 정당성
4. 전쟁과 ‘일그러진 민족’: 1950년대 민족담론의 분석
5. 1950년대와 21세기: 연속과 단절

6. 한국 국부(國父)들의 자유민주주의 개념: 제헌국회 이후 이승만 권위주의 등장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 의사록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연구 개요:

냉전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권력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원화된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이원화 과정은 반공과 냉전, 정당의 성립과 정당정치의 전개, 효율추구의 발전국가의 등장, 권위주의체제의 성립,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저항 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등을 거치면서 등장한 중앙집권화된 1인체제의 정당, 대통령과 행정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국가운영, 절차를 무시하는 발전국가의 효율주의, 미소냉전의 심화와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반공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자리잡게 했다면, 이에 저항하는 민주세력과 시민사회의 성장은 저항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심화, 정당의 성립과 권위주의적 국가운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건국 초기와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국부들이 의회를 중심으로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이원화의 과정을 겪기 이전의 자유민주주의의 참여, 절차적 중요성, 비정파적 국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냉전과 권위주의의 심화 이전에 제헌국회를 포함한 초기국회의 자유민주주의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이원화 이전의 초기 국회의 자유민주주의 담론을 국회회의록의 국부의원들의 발언기록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냉전기 아시아의 근대화 논쟁과 한국:
1960년대 ‘조국 근대화’론 성립의 개념사적 접근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개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된 냉전적 경쟁은 물질적 차원을 넘어 역사변화 혹은 진보의 경쟁, 체제경쟁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의 주체인 양진영은 변화의 핵심개념 정의에 대한 경쟁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예컨대 맑스주의의 갈등과 혁명적 진보 모델에 대한 경합으로서 로스토우의 비갈등적이고 진화적인 진보 모델("non-communist manifesto")의 등장에서 보듯이 근대화(modernization)란 개념은 냉전이란 지정학적 분단구조 하에서 특정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례는 미국의 냉전적 이해관계와 일본내 보수적 정치지형 속에서 형성된 근대화 개념이 메이지이래 일본의 근대사를 재창조하는 이념적 프로젝트로 전화되면서 국내적으로 치열한 지적, 정치적 경합이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1960년대 한국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성립과정을 개념사적 접근으로 이해하려 한다. 수입된 개념으로서 근대화가 한국의 지적, 정치적 지형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과정을 1950년대 후반-60년대 초반 일본의 근대화론 논쟁과 비교 분석하여 70년대 이후 전개된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1969년대 냉전기 갈등의 주체들이 자기를 구성하는 개념을 경쟁적으로 정의, 재정의하는 과정에 둘 것이다.

8. 냉전기 한국과 북한의 근대화 및 통일전략: 자주의 개념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연구 개요:

남북한은 1945년 이후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업을 둘러싸고 남과 북으로 갈려 독립하다가 결국 1948년 이후 각각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후 남북한은 근대화의 과업과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의 과업을 동시에 이루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각자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였지만 대외관계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에서 경쟁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자주국방, 자주경제, 자주외교, 그리고 자주적 이념을 정립하고자 경쟁했다.

따라서 자주의 개념은 냉전기 남북한의 국가전략 및 대외전략, 통일전략이 집약된 개념이다. 자주의 개념은 독립, 발전, 자조 등의 개념과 연관을 가지고 남북한의 대내외 전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자주의 개념은 남북한의 냉전기 전략을 이끄는 개념이기도 했고, 냉전 시기 각 단계별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변천해왔다. 또한 남과 북이 7.4 남북 공동성명 등 한시적 화해, 협력을 이룰 때에도 중요한 공통개념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자주는 대립과 경쟁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협력과 통일 지향의 개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면적 의미를 함께 밝힌다면 남북관계의 협력적 부분도 아울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북한 양측이 냉전기에 각자의 국가전략 부문에서 자주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여 왔는지, 그리고 남북한이 협력을 위해 자주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9. 남북한 평화개념의 분단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 개요:

21세기 한반도의 남북한은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개념의 분단화가 1950년대 한국전쟁시기, 1960년대 국가재건시기, 1970년대 7.4공동성명시기,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의 네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남북한의 1차자료 중심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